

新정부 여성 어젠다

‘그림자’ 아닌 ‘정치적 동반자’ 원한다

‘영부인 비서실’을 만들자는 정책학자들과 여성계의 ‘내셔널 어젠다(국가과제)’ 제안은 영부인 역할의 제고를 통한 ‘공적인 존재’ 확립이 핵심이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제1참모이자 ‘여권신장’의 상징적 대변인으로 불리지만, 그동안 ‘수줍은 그림자적 내조’에 가려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역대 정부는 영부인을 ‘여성’이라는 굴레로 묶어 비중을 두지 않고 홀대했다는 지적이다. ‘공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대 영부인들을 둘러싼 잡음과 사건은 끊이지 않고 ‘유희’했다는 것이다.

정책학자들과 여성계는 “이제 국민은 대통령의 내조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정치적 동반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부인 스스로 그들만의 고유 영역을 찾아 새로운 영부인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부인의 역할을 개인과 시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식화해야 하며, 영부인이 자신에 맞는 페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달라붙어야 하고 집합해야 할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부인 비서실이 필

요하다는 것.

영부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한(1967년, 93년) 미국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부인만을 위한 언론비서, 연설문 작성자 등 6명의 전문 보좌진과 8명의 행정 보좌진을 각각 갖춘 발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부인을 위한 헌법과 법률은 물론 이를 관장할 제도와 부서조

에 ‘영부인 비서실’을 두면 밀실의 뒷거래 등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이미지 메이킹과 영부인 연구 등 체계화된 보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의 장은 ‘차관급’으로 하되 전속 연설담당자 등 10명 안팎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법률 마련을 통한 급진적인 제2부속실 격상보다는 현 대통령비서실과

영부인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국민의 친근감 유발과 여론을 수렴, 추후 연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사 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 기념관에는 역대 영부인의 활동사를 정리한 사진, 입던 의상, 청와대 내부살림 등이 전시되고, 각종 행사자료와 연설문, 대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록으로 보존되는데 이 또한 영부인 비서실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추애주 여성학자는 “이제 영부인은 대통령 내조자를 넘어 공적 포지션을 갖출 때고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영부인은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비주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때 언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해 반영할 자문위원단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영옥 기자 kyw@iwomantimes.com

밀실 뒷거래 방지·여권신장 위해 필요
위상격상보다 조직내 관계정립 주장도

차 없다. 다만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영부인의 일정과 의전, 미용과 의상 등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제2부속실은 1급 상당의 실장과 행정관 등 5명, 계약직으로 전담 미용사 1명이 소속돼 있을 뿐 그 규모와 기능은 미국과 크게 다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영부인 보좌를 병행하고 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제도화된 틀 속

연계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공적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희 전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은 “영부인의 공적활동은 대통령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제2부속실 격상에 따른 위상보다는 대통령비서실 조직안에 만들어져 유기적인 관계로 논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책학자들과 여성계는 ‘역대

도움말

△김광웅 서울대 교수 △함성득 고려대 대통령학 교수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법 정치부장 △안희옥 전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 △이승희 전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 · 현 청소년보호위원장 △이명숙 변호사 △추애주 여성학자